

제 4 교시

2025학년도 수능대비 P&L COLLEGE 모의고사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십시오.
- 매 선택과목마다 문제지 상단에 제(1), (2) 선택과목 응시 순서를 정확히 쓰시오.
- 매 선택과목마다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이미 우린 저기 멀리 높이 있는 풍선같이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 문형(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지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정치와 법 1~4쪽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P & L COLLEGE

[출제]

kdwkdw0927@naver.com

* 출제자 성명은 출제자 이메일로 같습니다.



* 확인 사항

○ P&L COLLEGE의 문제지 및 모든 문제의 저작권은 출제자인 kdwkdw0927@naver.com에게 있습니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정치와 법)

성명 수험 번호 - 제 () 선택

1. 정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국회가 소음공해 방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달리, 학교 구성원들이 모여 학교 주변 소음공해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정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을 : 아닙니다. 학교 구성원들 간의 논의도 정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① 갑의 관점은 정치의 주체가 다양하다고 본다.
- ② 을의 관점은 이익집단 내 대표자 선출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 ③ 갑의 관점과 달리 을의 관점은 다른 사회 집단과 구분되는 국가 기관의 행위만의 특수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 ④ 을의 관점과 달리 갑의 관점은 아파트 구성원 간 갈등조정 과정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 ⑤ 갑의 관점과 을의 관점은 모두 국회의장의 본회의 주제를 정치로 보지 않는다.

2.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의 권력 작용의 범위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으로 규정하여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A에는 법의 내용의 정당성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한편, A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B에 따라 (가) 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 ① A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본다.
- ② B는 형법의 보호적 기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③ A와 달리 B는 통치의 정당성보다 합법성을 더 중시한다.
- ④ B와 달리 A는 입법자를 제외한 모든 국가 권력은 법률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⑤ (가)에는 '위헌 법률 심사제'가 들어갈 수 있다.

3.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지방 의회 중 하나임.) [3점]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A는 주민의 대의 기관인 B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얼마 전 ㉠○○도와 ○○도 ㉡□□시의 A가 각각의 B가 의결한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사례를 통해 A에게 재의 요구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 ㉠의 의회와 ㉡의 의회는 수평적 권력 분립 관계에 있다.
- ②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A의 예산안 편성권에 대한 통제 수단이다.
- ③ B는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은 조례를 개정할 수 없다.
- ④ A와 B의 모든 구성원은 주민 소환의 대상이다.
- ⑤ B와 달리 A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4.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임.) [3점]

○○신문	△△신문
국민의 선거를 통해 구성된 갑국의 의회는 행정부 수반이 제출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번 총선 결과 현재의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단독 내각을 구성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통해 을국의 야당이 의회 과반 의석을 획득하는 데에 성공하면서 의회 해산권이 없는 을국의 행정부 수반은 소상공인 대상 20 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 이행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① 갑국의 행정부 수반은 의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② 을국의 의회는 행정부에 대해 총사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③ 갑국과 달리 을국은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국민 선거에서 평등 선거 원칙을 지킨다.
- ④ 을국과 달리 갑국의 행정부 수반은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된다.
- ⑤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모두 책임 정치 구현에 용이하다.

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신문 ○○○○년 ○월 ○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갑은 선거 운동 중 타 후보 을이 과거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받은 사실과 폭행 혐의로 수사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언급하며 을에 대한 비방 메시지를 포함한 연설로 인해 공직선거법 ○○조 및 □□조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 계속 중 갑은 공직선거법 ○○조의 '허위의 사실'이 죄형법정주의 피생원칙 중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조의 '비방 금지' 조항이 자신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정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재판소에 (가)를 청구하였다.
 갑의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조의 조항 중 '허위의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맞지 않는 바를 의미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어서 "□□조의 '비방 금지' 조항은 후보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비방 행위가 허위 사실에 해당할 경우 ○○조의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근거로 처벌하면 족하고, 허위가 아닌 사실에 대한 경우에 후보자는 스스로 반박함으로써 유권자들이 그의 능력과 자질 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하여야 하므로 후보자에 대한 비방 행위를 ○○조뿐만 아니라 □□조에서도 규제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피해가 최소한으로 그치지 못했다."며 □□조의 '비방 금지' 조항이 갑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보 기>
 가. (가)의 대상은 법원의 결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나.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조와 □□조가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갑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존재하고, 그 경우 갑은 □□조를 근거로 한 재판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가 ② 나 ③ 가, 다 ④ 나, 다 ⑤ 가, 나, 다

6. 정치 참여 집단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임.)

구분	A	B	C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	○	×	×
공익보다 집단의 사익을 우선시하는가?	×	×	○

- ① A의 의회 진출을 위한 선거는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
- ② B는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 ③ C는 정책 결정 기구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④ A와 달리 B는 언론과 함께 여론을 형성한다.
- ⑤ B와 달리 C는 당정 협의회를 통해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7. 우리나라 헌법 기관 A~E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HOME > 연재 > □□□의 정치와 법 교실
우리나라 국가 기관 알아보기

우리나라는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제65조에 따라 A에게 B의 장(長), C, D의 장(長), E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부여하였으며, 헌법 제97조에 따라 B에게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의 직무에 관한 감찰 권한을 부여한 것도 의의를 같이 한다. 한편, C는 D의 장(長)의 제청과 A의 동의를 차례대로 거친 후 E가 임명함으로써 일반 법관의 임명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보 기>

ㄱ. A는 E의 조약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ㄴ. C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ㄷ. B와 달리 D는 명령과 규칙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위헌성에 대한 심사권도 갖는다.
 ㄹ. B는 A와 C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지만, E를 피청구인으로 하지는 못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8. 범죄의 성립 요건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례	범죄 성립 여부
갑이 생명에 대한 협박을 받아 법정에서 위증한 행위	갑의 행위는 A가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
지갑을 도난당한 을이 다음날 자신의 지갑을 사용하고 있는 병을 붙잡아 지갑을 도로 빼앗는 행위	을의 행위는 B가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
(가)	정의 행위는 A, B, C가 모두 인정되어 범죄가 성립함.

- ① A는 행위가 아닌 행위자에 대한 판단을 한다.
- ② B의 조각은 전체 범죄사에 비추어 보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가치 판단을 의미한다.
- ③ C가 성립하지 않는 사유로는 '긴급 피난'이 있다.
- ④ B가 인정된다면, A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 ⑤ (가)에는 '심신 상실 상태의 정이 타인을 특수폭행한 행위'가 들어갈 수 있다.

9.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의 의회는 지역구 의원 200인과 비례대표 의원 200인으로 구성되며, 표는 최근 갑국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고 <자료1>의 두 가지 선거 제도 중 한 가지 제도가 채택되어 선거가 이루어졌다.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

구분	A당	B당	C당	D당	전체 의석수(석)
지역구 의석수(석)	109	73	8	10	200
정당 투표 득표율(%)	30.5	64	4.5	1	200

<자료1>

- <1안>: 100개의 선거구에서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며, 각 정당의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만큼 각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하여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한다.
- <2안>: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에서 지역구 선거구 수를 <1안>의 두 배로 늘리되, 비례대표 의원 선거 방식은 <1안>과 동일하다.

한편, 갑국은 같은 시기에 별도의 국민 선거로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였다. 후보자 a, b, c, d는 각각 A, B, C, D당 소속이며, 후보자 중 a가 선거비용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유권자는 100그룹(V1~V100)이고 유권자 집단별로 동일 후보자에게 투표하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인이 당선된다.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선거비용을 더 많이 사용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표는 유권자 집단별 투표 결과이다.

<갑국의 행정부 수반 선거 결과>

유권자 집단	후보자			
	a	b	c	d
V1~V10		○		
V11~V40		○		
V41~V80	○			
V81~V100				○

* 유권자 1인은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에 1표, 전국구 비례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 정당에 1표를 행사하고 행정부 수반 선거에서도 1인 1표를 행사하며, 모든 선거에서 투표율은 100%이고 무효표는 없다.
 ** 갑국 내 정당은 A~D당만 존재하고, 무소속 의원은 없다.
 *** 지역구 선거에서 각 선거구별로 같은 수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며, 모든 정당은 각 선거구에 한 명의 후보자만을 공천할 수 있다.

- ① <1안> 과 달리 <2안> 에는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선거구제'가 포함되어 있다.
- ② 의회 의원 선거에서 채택된 선거 제도는 <1안> 이고, 행정부 수반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자는 a이다.
- ③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에 따르면 과대 대표된 정당의 수보다 과소대표된 정당의 수가 더 많다.
- ④ 최근 선거 결과에 따르면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대립으로 둘 사이에 긴밀한 협조가 어려울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 ⑤ ㉠의 방식은 선거구 법정주의가 아닌 선거 공영제를 위배한다.

10.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 사회에서 국가들이 지켜야 할 보편적 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A는 개별 국가의 이익 추구 행위와 상호 불신 때문에 국제 사회의 협력이 달성되기 어렵다고 본다. 반면, 국제 사회에서 국제기구의 역할을 증시하는 B는 국가 간 상호 의존을 통해 국제 사회의 협력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 ① A는 국제 관계에서 국제 관습법의 역할을 증시한다.
- ② A는 국제 사회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본다.
- ③ B는 국제 사회에 강제력 있는 중앙 정부가 존재한다고 본다.
- ④ B는 국제 사회에서 집단 안보 체제의 역할을 경시한다.
- ⑤ 총회의 의결 방식은 B가 아닌 A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1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고등학생 갑(16세)은 부모 을의 동의 없이 학교 친구 병(16세)과 300만 원에 자전거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병에게 병의 법정 대리인인 정(17세)의 동의서 요청하여 정(17세)의 동의를 받은 후, 병에게 300만 원을 받았다. 다음날 갑은 병에게 자전거를 전달하려 가던 중 교통 사고를 당해 자전거가 망가졌다. 이에 갑을 기다리던 병은 갑의 사고 소식을 듣고 갑에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당장 갑을 돈이 없던 갑은 집 주변 □□의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마련하기로 하고 □□의류 매장 사장 무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무는 갑이 제시한 부모 을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했다. 다음은 갑과 무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일부이다.

근로 기간: 2024년 9월 27일 ~ 2024년 12월 31일
 근무 시간: 12시 ~ 19시 30분 (휴게 시간: 18시 ~ 18시 30분)
 근무일: 매주 수요일 ~ 일요일(휴일: 매주 월, 화요일)
 임금: 시간당 10,200원, 매달 30일 갑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

* 2024년 법정 최저 임금은 9,860원이고, 을은 갑의 법정 대리인이다.

- ① 갑은 병에게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② 병이 제시한 정(17세)의 동의서가 위조된 것이라면, 갑은 정에게 계약의 추진 여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③ 을은 갑이 병, 무와 체결한 계약을 갑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④ 갑이 무의 근로계약에서 '휴게 시간과 달리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⑤ 갑이 무와 합의하여 수요일에 21시까지 더 근무하고 연장 근로에 따른 임금과 가산금을 받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1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자녀 A(12세)와 함께 을이 병 소유의 건물 1층을 임대해서 운영 중인 카페에 방문했다. 갑이 을에게 음료 두 잔을 주문한 후 결제하는 동안 A는 을의 자녀 B(11세)와 함께 건물 밖에서 카페 손님 정(18세)이 데려온 정(17세)의 지인의 반려견과 놀고 있었다. 을의 가게의 아르바이트생인 무(27세)는 갑이 결제한 음료를 들고 가던 중 건물 바닥에 있는 틈에 걸려 넘어지면서 다리에 부상을 입고, 들고 있던 음료는 정(17세)의 바지에 쏟아졌다. 이에 화가 난 정(17세)은 카페의 플라스틱 컵을 사용해 폭행하여 무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고, 정이 사용한 컵은 깨졌다. 한편, 무가 걸려 넘어진 바닥의 틈은 병이 인테리어업체 사장 C와 3일 뒤 보수공사를 하기로 계약한 건물 내 하자 중 하나였다. 이후 카페 밖으로 뛰쳐나가던 무는 A와 B가 같이 놀고 있던 반려견에게 물어오게 할 목적으로 던진 나뭇가지에 머리를 맞았고, 나뭇가지를 보고 달려든 반려견이 무의 팔을 물어 무는 머리와 팔에 부상을 입었다. 하루 뒤, 정은 을이 청구한 깨진 플라스틱 컵에 대한 손해를 배상했다.

- ① 을과 C는 각각 갑과 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 ② 을이 무에게 발생한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면, 무는 을과 병에게 치료비를 포함한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 ③ 을의 정에 대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정과 무는 고의의 여부에 상관없이 서로에 대해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④ 정이 동물의 특징에 따라 그 보관에 필요한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면, 정은 무에게 동물의 소유자로서 과실 책임을 진다.
- ⑤ A와 B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면, 갑과 을은 모두 무에게 법정 감독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고, 일반 불법 행위 책임도 지지 않는다.

13. 기본권 유형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관적 공권'이라고도 불리는 A는 소극적·방어적 성격의 기본권을 포함한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 예시로는 청원권이 있다.

- ① 재판 청구권과 배상 명령 청구권을 포함한다.
- ② 공무 담임권과 투표권을 포함한다.
- ③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이다.
- ④ 헌법에 열거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 포괄적 권리이다.
- ⑤ 공익을 위해 헌법에 따라 본질적인 내용도 침해할 수 있다.

[14~15]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17세)은 같은 ○○고등학교 친구 을(17세)이 돈을 빌리고 계속 해서 갚지 않자 강제로 뺏을 계획을 세웠다. 갑은 을의 학원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주변 골목에서 자신의 동생 병(13세)과 숨어 있다가 을이 학원에서 나오자 을을 골목으로 데리고 가 병과 함께 을을 폭행하고 돈을 갈취했다. 이로 인해 을은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한편, 갑은 자신의 중학교 후배인 정(14세)에게 을의 신발을 절도할 것을 폭행을 행사하며 강요했고, 정은 ○○고등학교에 몰래 들어가 을의 신발장에서 신발을 가지고 나와 중교 거래로 팔아버렸다. 갑과 병은 폭행 현장을 목격한 경찰 무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무는 갑과 병을 조사하던 중 갑의 강요에 의한 정(14세)의 절도 사실도 알게 되어 본인 집에 있던 정을 체포했다. 이때 체포는 긴급체포가 아니었다. 이후 무는 갑과 정을 검사에게 송치했고 경찰서장은 병을 가정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으며, 검사는 정과 달리 갑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상해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된 갑에게 징역 2년을 선고 하면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그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14. 위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기 〉

- ㄱ. 병과 달리 형사상 책임 능력이 있는 갑에게는 형벌과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 ㄴ. 무는 병을 검사에게 송치할 수 없었을 것이다.
- ㄷ. 갑, 병과 달리 정을 체포할 때 무는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있었을 것이다.
- ㄹ. 정은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을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위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① 무는 갑을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 ② 검사는 갑을 기소하기 전에 법원에 갑에 대한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었다.
- ③ 을의 항소로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달리 갑에게 2년 동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 ④ 갑은 2심 법원의 판결이 아닌 1심 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 되었다더라도, 국가에 형사 보상 제도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을은 갑과 병, 정으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해 국가에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6. 민법의 기본 원칙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A를 따른다. 이와 달리 제조물의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결함이 있는 제조물의 구매를 강요하여 체결된 구매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은 B를 따른 것이다.

- ① A와 B는 모두 근대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② A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도 불린다.
③ A에 따르면 개인의 재산권은 국가가 제한하지 못한다.
④ B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도 불린다.
⑤ B에 따르면 타인을 살해할 것을 급부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1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A 회사 직원인 갑이 회사 내 노동조합 활동으로 회사가 지시한 업무 외의 일인 창고 정리를 이행하지 않자, A 회사는 갑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갑은 A 회사의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A 회사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만 기각되었다. 이에 불복한 갑과 A 회사는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몇 년간의 법정 공방 이후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의 항소에 대해 □□고등법원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부당한 '갑의 근무 지시 불이행'이 확인됨을 이유로 원고의 모든 청구를 인용한 □□행정법원의 모든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다. 이에 A 회사가 상고하자 대법원은 갑의 해고가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후, 부당 노동 행위와 달리 부당 해고에 해당하지는지에 대해서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① □□행정법원이 맡은 재판의 당사자는 갑과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이다.
②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중앙 노동 위원회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③ 중앙 노동 위원회는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행정법원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④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인지에 대한 □□행정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동일하지 않다.
⑤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노동 행위인지에 대한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동일하다.

18.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에서 사회 보험, 공공 부조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 보장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A를 실현하기 위함이며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한 의무교육제도는 A뿐만 아니라 B의 실현 방안에도 해당한다. 한편, C의 실현 방안으로는 국가 권력의 분립을 예로 들 수 있다.

- 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A의 실현 방안이 해당한다.
②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B의 실현 방안이 해당한다.
③ C와 국민 주권주의의 공통된 실현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④ 적법 절차의 원리는 C의 실현 방안이 해당하지 않는다.
⑤ A와 B는 모두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

19. 다음은 학생이 수행한 학습지 활동이다. 학생의 '판단 결과'로 옳은 것은? [3점]

[학습지] 다음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적절하지 판단하시오.

최근 영화배우 갑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서 그의 막대한 재산을 누가 상속받게 될지가 주목받고 있다. 갑과 을은 법률훈을 하고 그 사이에서 A와 B를 낳았지만, 을이 갑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갑은 A와 B의 양육권을 을에게 넘겨주고 둘은 이혼했다. 이후 갑은 지인 병과 혼인신고 후 동거하였고, 몇 년 뒤 병은 A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한편, 갑과 이혼한 을은 정과 법률훈을 했는데, 당시 정은 무와 이혼 조정에 실패해 다음 절차를 거쳐 이혼한 후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 C를 홀로 양육하고 있었다. C가 촉법소년이 아니게 된 해에, 을과 정 사이에서 D가 태어났고 정은 성인이 된 B를 입양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갑의 어머니 E와의 인터뷰에서 갑이 하루 전 사망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with 2 columns: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판단 결과. Rows include inheritance of 甲's assets, divorce effects, adoption of 乙's child, 甲's death and estate, and 乙's remarriage.

20.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C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국이 을국의 영토 일부를 점령하고 해당 지역에서 자국의 정책과 관행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 속 A는 갑국의 이러한 행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결과에 대해 주요 사법 기관인 B에 자문을 요청하였다. 이에 B는 갑국이 을국의 영토를 점령하는 것은 불법이며, 점령 중 을국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밝혔다. 한편, 국제 연합 내 실질적 의사 결정 기관인 C는 갑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는 을국 영토 내 민간인을 보호를 위해 ㉠갑국에 대한 군사적 제재 결의안을 논의 중이다.

<보기>

- ㉠. A는 국제법 주체임에도 조약의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C와 달리 A의 의결은 권고적 효력에 그치므로, 국제 연합의 회원국은 A의 의결을 무시하더라도 A에 의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
㉢. 갑국과 을국이 C의 구성원이라면, 갑국과 을국의 비상임 이사국 여부와 상관없이 C에서 ㉠은 채택될 것이다.
㉣. 을국의 제소로 B에게 '갑국의 불법 영토 점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판의 관할권이 발생했다면, 갑국은 제소에 합의하였을 것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